

2024. 2. 27.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2월 26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

장애인복지정책과장

임지훈

02-2133-7440

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: 7쪽

장애인지역사회
거주팀장

김은영

02-2133-736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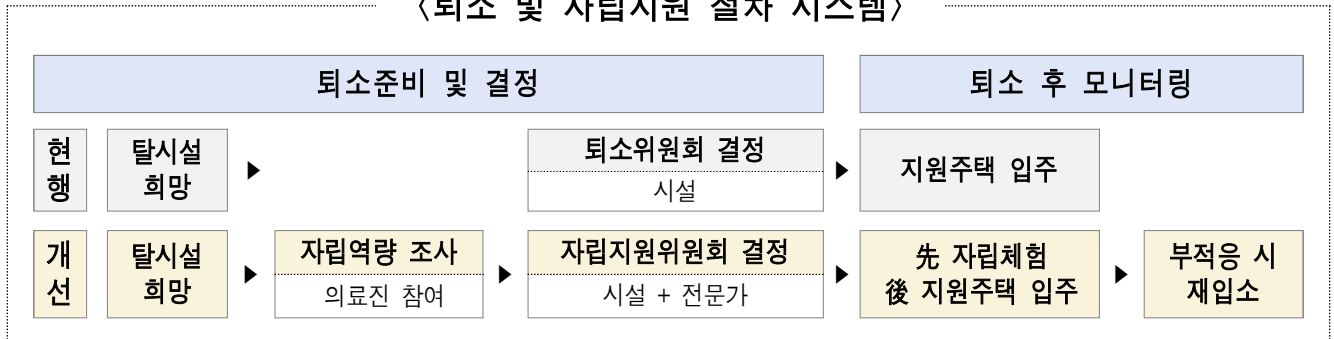
서울시, '장애인 자립절차' 개선해 시설 퇴소 전·후 촘촘하게 지원한다

- 성공적 정착 돕는 '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'... 올해 1,900명 자립역량 조사
- 퇴소 전 건강상태 등 포함 의료진 자립역량 상담, 퇴소 후 모니터링 등 절차 보완
- 설문 결과 '건강관리·고립감' 등 어려움 반영... 정착 어려운 장애인 재입소 길 열어
- 시 “장애인의 주거선택권” 최우선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립 지원해 나갈 것”

- 앞으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, 의료진이 건강 상태를 비롯해 자립역량을 면밀히 상담하고 지원주택에 들어갈 때에도 바로 입주하지 않고 ‘자립체험 기간’을 통해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된다.
- 서울시는 장애인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역량 점검부터 퇴소 후 지원까지 아우르는 ‘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안’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- 시는 올해 시내 39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,900명의 자립역량을 조사할 계획이다.

- 이번 개선안에는 ▲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퇴소 전 자립역량 상담 ▲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립지원위원회 퇴소 검토 ▲퇴소 후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지원, 이렇게 신설·보완된 절차가 담겼다.
- 시는 종전에 시설 거주 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하면 퇴소위원회에서 여부를 결정, 지원주택 입주를 돕는 절차로만 진행되다 보니 퇴소 후에 적응 및 생활이 이뤄지는 과정 등을 면밀히 살피고 지원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체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.

〈퇴소 및 자립지원 절차 시스템〉



<퇴소 전 건강상태 등 포함 의료진과 자립역량 상담, 퇴소 후엔 모니터링을 통한 지원>

- 먼저 장애인의 시설 퇴소 결정 전에 진행되는 자립역량 조사는 의료진 등 전문가 상담과 대면 심층조사를 통해 신체·정신적 건강 상태 확인, 의사소통·일상생활 수행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자립·단계적 자립·시설 거주, 3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.
- ‘우선 자립’이 가능하다 판단되면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을 지원 절차에 들어가며 ‘단계적 자립’은 5년간 자립 연습기간을 갖고 준비, 퇴소한 뒤에도 체험홈 등을 통해 자립생활을 충분히 경험한 후 지원주택·민간임대주택 등 정착을 도움받게 된다.
- 자립역량 상담 후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

토하는 ‘자립지원위원회’를 연다. 기존에 시설 관계자만 참여했던 퇴소위원회가 아닌 의료인·재활상담가·자립지원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퇴소 및 자립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.

- 자립생활을 천천히 익힌 뒤에 지원주택에 정착할 수 있도록 퇴소 절차를 밟는 동안에 충분한 체험 기간을 부여하고,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정착에 불편이나 어려움이 없는지도 지속 모니터링한다.
- 앞으로는 자립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, 자립역량 재심사 절차를 통해 필요시 시설 재입소도 지원할 계획이다.

<퇴소장애인 조사 결과, ‘생활 만족도’ 비교적 높으나 건강관리·고립감 등 어려움 겪어>

- 서울시는 이번 ‘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’에 앞서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및 생활실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8~12월,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700명(응답 487명)의 ‘자립 실태’를 조사한 결과, 응답자들의 ‘전반적인 삶의 만족도’는 5점 만점에 4.3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.
- 조사는 ‘09~’22년 사이 지역사회에 정착한 장애인 700명을 대상으로 복지담당 공무원과 전문 조사기관이 함께 입·퇴소 과정의 적절성, 생활실태, 건강 상태, 만족도 등 총 35문항을 파악했다.

- 다만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비교적 높지만 심층사례 조사 결과, 기저 질환이나 병력이 있는 중증 고위험군의 건강 문제, 지역사회로부터의 고립감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건강상태 확인을 포

합한 자립역량 조사, 자립체험 기회 등 절차를 추가기로 한 것이다.

- 특히 탈시설 후 주 돌봄자가 부모인 경우, 자립생활을 이어가기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돌봄 공백 우려 등 이유로 시설 재입소를 희망하기도 했으며 퇴소 후 지병 등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사례도 있었던 만큼 절차 개선이 필요했다.

“ 시설이 포화상태라고 하는데 내가 죽은 이후에는 자녀를 시설에 보내고 싶다 ”

“ 시설 입·퇴소가 자유로웠으면 좋겠고, 건강이 악화되거나 나이가 들어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시설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다 ”

“ 시설에 있을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줄어들어 우울감을 느낄 때가 있다 ”

-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“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”며 “장애유형·건강 상태·소통능력·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‘장애인의 주거선택권’을 최우선으로 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을 지원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□ 조사개요

- 조사대상 : '09년 이후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한 장애인 700명
- 조사내용 : 입퇴소 과정의 적절성, 생활실태, 건강상태, 사회참여 등
- 조사기간 : '23. 8~12월 ※ 사례 조사 ('24. 1~2월)
- 조사방법 : 자치구 공무원, 전문 조사업체와 2인 1조 동행조사
- 조사문항 : 총 35문항(서울시가 조사표 및 동의서 개발)

□ 조사응답

- 조사결과 : 응답(69.6%, 487명), 조사제외(30.4%, 213명)
 - 응답유형 : 본인(24.2% 118명), 대리(75.8%, 369명) ※조사제외 : 조사 거절, 타지역 전출 등

□ 주요결과

○ 일반현황

- (성별) 남 61%, 여 39%/ (연령) 40~50대(65.5%) > 30대 이하(22%) > 60대 이상(12.5%)
- (장애정도) 심한 98.4%, 심하지 않은 1.6%
- (장애유형) 발달 60% > 뇌병변 16.5% > 시각 12.9% > 지체 8.0%

○ 입퇴소 현황

- (평균 시설거주) 17.1년 / (평균 지역거주) 7.0년
- (입소결정) 모름(36.8%, 165명) > 부모(33.3%, 149명) > 본인(16.7%, 75명) 순
- (퇴소결정) 본인(72%, 350명), 대리(28%, 137명)
 - 대리 : 시설관계자(24.5%, 119명) > 부모(13%, 63명) > 형제자매(3.1%) > 등
- (퇴소시점) '18~'22년 57.1%(234명), '13~'17년 26.8%(110명), '09~'12년 16.1%(66명)

○ 주거 및 지지체계

- (가구원 수) 단독가구 70.8%, 평균 1.6명
- (가구원 유형) 기타 47.2%, 부모 33.8%, 형제자매 19.7%. 친구·지인 등 10.6% 순

- (주거소유 및 임대) 공공 임대 80.1%, 민간임대 10.9%, 자가 4.9%
- (거주형태) 재가 57.7%, 자립 42.3% (지원주택 30.0%, 자립생활주택 12.3%)
- (지지체계) 활동지원사에 대부분 의존 (94.5점)

○ 활동지원서비스 현황

- (이용 여부) 이용 78.6%(383명) / 미이용 21.4%(104명)
- (월 평균/인) 319.4시간, 연 급여액으로 환산 시 59,674천원(23년 기준, 시간당 15,570원)
※ 최대 지원 867시간, 최소 지원 47시간
- (장애유형별 이용) 발달 73.6%(215명), 뇌병변 90.2%(74명), 시각 85.7%(54명)
지체 84.6%(33명), 그 외 63.6%(7명)
- (최중증 장애인 이용) 480시간(일 16시간) 이상 이용 장애인 23.9% (90명)

○ 경제 상황

- (경제활동) 참여 47.6%(232명) / 미참여 52.4%(255명)
- (일자리 유형) 장애인 공공일자리 67.8%(158명), 서비스업 10.7%(25명) 순
- (장애인 유형별 참여) 발달 49.7%, 뇌병변 32.9%, 시각 61.9%, 지체 33.3%
- (평균 월급)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0.7%(108명), 평균 102.7만원
- (미참여 장애인의 소득) 공적부조 89.4%(228명) 가족 등의 소득 6.3%(16명)

○ 건강 상태

- (의료문제로 의료기기 사용) 6.4%(29명) *도뇨관, 위루관, 비위관, 인공호흡기 등
- (정기적인 건강관리) 관리 33.9%(165명), 월평균 1회

○ 자립만족도 (* 5점 척도)

- (자립만족도) ①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·만족도 4.35점 ②전반적인 삶 4.31점
③사회적 활동 4.22점 ④신체적 상태 4.05점 ⑤경제적 상태 4.01점

○ 서울시에 바라는 자립지원 정책

- (우선순위) ①활동지원서비스 지원·확대 79.5% ②주거지원 78.2% ③소득지원 72.4%

참고2

시설퇴소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 개선(안)

○ 자립지원 절차 개선

(현 행) 퇴소 절차		개선(안)	
퇴 소 준 비	① 탈시설 정보제공 및 안내	자 립 준 비	① 장애인자립역량조사 (市) (우선자립, 단계적 자립, 시설거주)
	② 탈시설 욕구 조사(시설)		② 자립지원 상담·정보제공 (시설)
퇴 소 절 차 진 행	③ 퇴소 신청 (본인, 법적대리인)	퇴 소 절 차 진 행	③ 자립지원계획 수립 (시설) ※ ‘우선자립’ 단계의 장애인
	④ 퇴소위원회 개최 (시설)		④ 퇴소 신청 (본인, 법적대리인)
	⑤ 퇴소 통지 (시설 → 區)		⑤ 자립지원위원회 개최 (시설) ※ 내·외부전문가 등 포함
	⑥ 자립 여건 확인 (區)		⑥ 자립 여건 확인 (區)
	⑦ 퇴소 동의서 징구 (시설) (본인, 법적대리인)		⑦ 퇴소 동의서 징구 (시설) (본인, 법적대리인)
	⑧ 퇴소 지원 (시설)		⑧ 퇴소 통지 (시설 → 區)
퇴 소 후	⑨ 퇴소자 모니터링 (시설, 區)	모 니 터 링	⑨ 퇴소 지원 (시설)
			⑩ 체험홈, 자립생활주택 등 선택하여 先 단기 자립체험
			⑪ 지원주택으로 입주 지원

▼ (부적응한 경우)

자립역량 재심사(연 1회, 市)